

이 대통령 “세금은 핵폭탄”... ‘부동산 잡기’ 총력 지시

문제 원인으로 ‘대출 중심 투자’ 지목
금융·공급·세제 유기적 대응 강조
검찰개혁 논란, 당정 소통부족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과 관련해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되면 써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된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남의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유행이 되다 보니, 이를 하지 않는 국민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잘 찾아달라”며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공급 정책, 재정부의 세제 정책이 유



이재명 대통령과 김재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 각 부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개헌을 주도할 단계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며 “단계적·점진적 개헌도 하

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 부마항쟁 정신, 지방자치 강화, 계엄령 선포 요건 강화 등을 넣은 개헌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선 “(논의) 과정 관리가 조금 그랬던 것 같다”며 “갈등 의제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속의를 해야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속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관계자들 중) 나는 듣지도 못했다”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 책임 안 지는 이런 일이 벌어

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직접 거론하며 정부 측이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진짜 문제”라며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식으로,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하고 해결해야지 아예 안하는게 어둡느냐, 이상한 것 같다, 매우 부당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금융 관련된 걸 많이 맡고 있는 데가 정무위다.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도 고쳐야 되는데 진척이 안 된다”면서 “국회 가서 읍소를 하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하라). 그래도 소용이 없겠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 검찰개혁 2단계 합의... 공소청·중수청법 본회의행

검사 수사 지휘·개입 관련 조항 삭제
중수청 수사관련 검사 개입 통로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2단계 법안(공소청·중수청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정청래 대표가 강조한 당정청 간 ‘물밑조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설명 등 수습이 계속되자 빠르게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공소청·중수청법 1차 정부안이 제시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정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그대로라며 “국민이 걱정된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 관련 여러 조항을 삭제했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했다.

정 대표의 기자회견에 앞서 이 대통령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률’로 수정하고 ▲중수청 수사관의 입건 등 통보 의무와 검사의 입건 요구권 등을 배제하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또 기소 전담 기관으로서 공소청을 설치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도 삭제하도록 했다. 공소청의 수사 중지 및 사법경찰관리 등 직무배제 요구권도 당정청 협의안에서는 삭제했다.

공소청장 등 상부 지휘·감독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동일체 논란이 불거진 공소청장의 직무 위임·이전 및 승계권도 삭제했다. 기존 사건에 대한 예외적 경과 기관도 90일로 단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에서 공들여 조율한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며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은 여권의 오래된 숙원이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청 폐지라는 1단계 조치가 있었고, 2단계 조치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에 정지권과 여권 지지층의 눈길이 쏠렸다.

하지만 1월 1차 정부안 발표 이후 수정을 거쳐 지난달 2차 정부안이 발표됐음에도,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나 강성 지지층 내에서 비판이 나왔다. 수정안

이 검찰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논란이 과열되면서 최근엔 유튜브 김어준씨의 방송에선 ‘대통령 공소취소 거러설’까지 나오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당내 논란이 계속되자 정 대표가 먼저 지난 13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인 제가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율해서 여러분의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수정안은 정부안이라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다. 특히 공소청 책임자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칭 논란이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책임용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 강경파를 향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선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출마 선언한 오세훈 “혁신 선대위 관철”

“선당후사 정신으로 후보 등록”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시청 본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서울시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선다”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의 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서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서울에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상식이 이기고 민생이 앞서는 길은

서울에서부터 열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로 당의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후보 등록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만 보겠다”며 “대통령의 선택이 아닌, 시민의 선택으로 반드시 승리해 ‘박원순 시즌 2’를 막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극우 유투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공천 신청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오 시장은 “위기 때마다 스스로를 바꿔왔던 보수의 쇠신 DNA가 지금 우리 당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우리 당의 빛나는 전통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보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강원 김진태·경남 박완수·울산 김두겸 공천

국힘, 부산 박형준·주진우 2인 경선

국민의힘이 17일 6·3 지방선거 울산 광역시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경남도지사 후보에 각각 현역인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를 단수 공천했다. 부산시장 후보는 박형준 현 시장과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경선을 통해 뽑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발표했다. 공관위는 울산시장 후보에 대해 “김두겸 시장은 주력 산업의 기반 강화와 함께 수소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 왔으며, 울산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울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김진태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정착과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왔으며, 그 탁월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강원도지사 후보로 다시 한번 낙점됐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박완수 지사는 풍부한 행정·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과 주력 산업 육성을 이끌어 왔고, 안정적인 도정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경상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고 했다.

또 공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서예진 기자